

## 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-고용, 경제-

민주당 정권이 공약한 정책 중 핵심적인 것은 고용, 경제에 관한 정책이다. 여기서는 고용, 산업, 경제, 외교 측면을 둘러싼 논의와 민주당이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.

### □ 각 분야의 기본이념

#### ○ 고용

- 직업훈련제도를 정비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
- 제조업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, 정규직과 파견직의 균등 대우
-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,000엔으로 인상

#### ○ 환경

-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% 삭감(1990년 대비), 2050년까지 60% 삭감 목표
- 배출량거래시장 창설, 지구온난화대책세 도입 검토
- 재생에너지 전량 매입하는 ‘고정가격매수제도’ 도입
- 연료전지, 초전도 등 환경에너지의 기술혁신으로 신산업 육성

#### ○ 산업경제

-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, 소비 확대로 일본경제를 내수주도형으로 확대, 안정된 경제성장 지향
- IT, 바이오, 나노테크 등 선진기술 개발 및 보급, 특히 환경관련 분야를 성장산업으로 육성

- 농업 가구별소득보상제도 창설, 의료/간호 인재의 대우 개선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
- 대출규제를 막기 위해 ‘특별신용보증’ 부활
- 정부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융자는 개인보증 철폐
-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‘지역금융원활화법’ 제정

#### ○ 정치외교

-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관계 구축
- 미국과 FTA(자유무역협정) 교섭 촉진
-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으로 아시아외교를 강화
- 아시아/태평양 국가와 EPA(경제연계협정)/FTA 교섭 적극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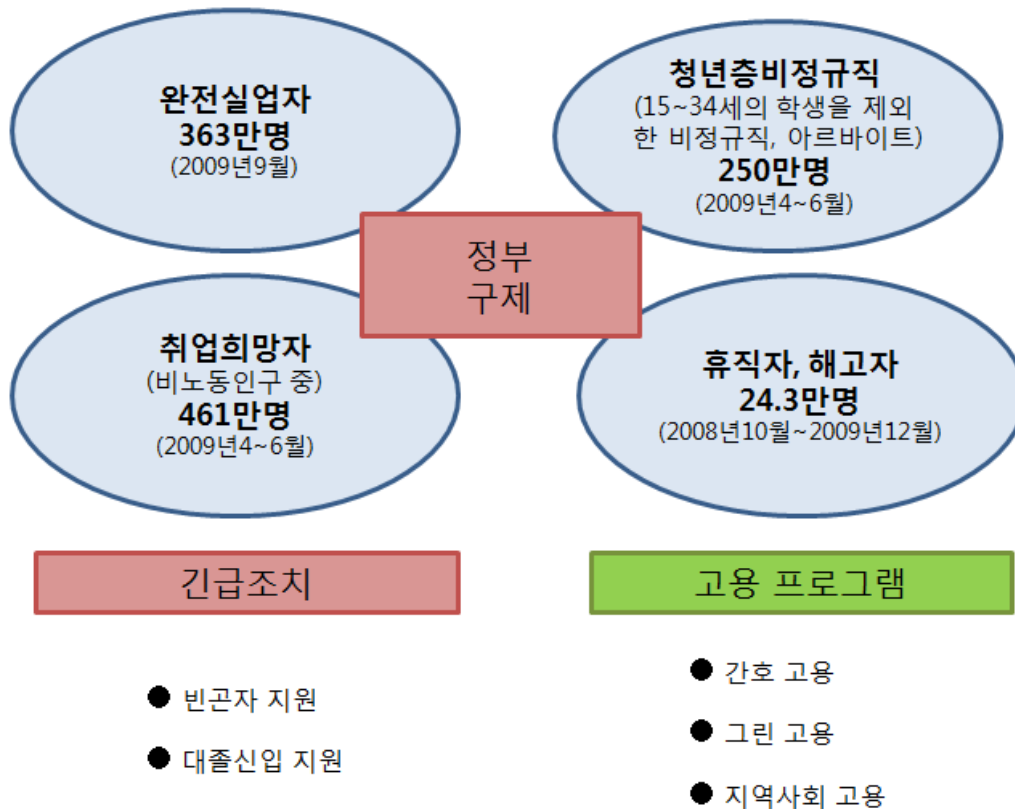
### □ 고용 정책의 실정 (그림1 참조)

- 2009.10.20,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빈곤율(전체 가구 중 1인당 가처분소득 100만엔/월 미만인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)을 공표, 2006년도는 15.6%
-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9월의 완전실업율은 5.3%, 유효구인 배율은 0.43배로 과거 최악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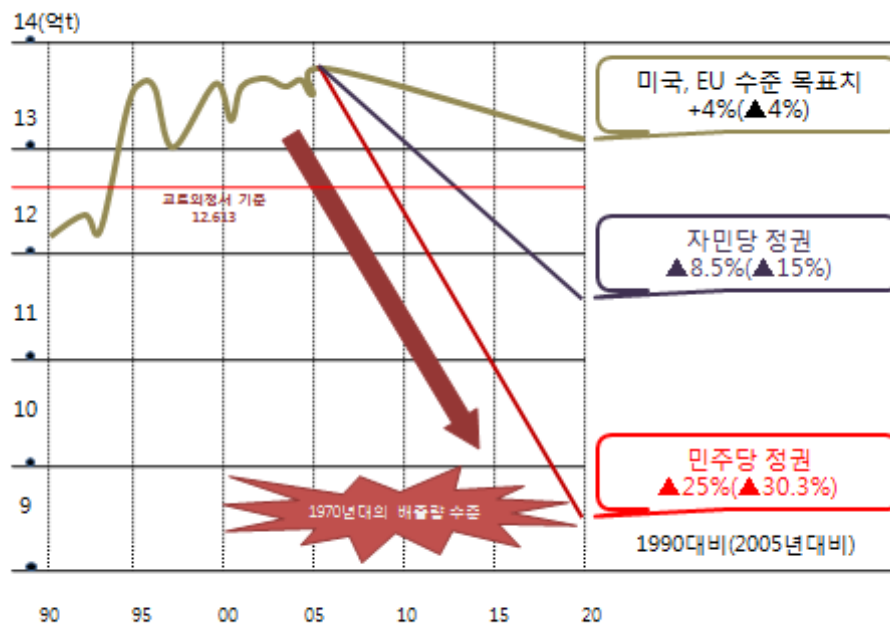
### □ 환경 정책의 실정 (그림2 참조)

- 2009.9.22, 하토야마 총리는 UN 기후변동 정상회담에서 ‘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% 삭감한다’ 고 선언,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목표 공표, 1970년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임
- 25% 삭감은 물리적으로 달성 가능하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(환경차 등의 가계 도입 등)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

[그림1] 정부가 상정하는 정책 대상자



[그림2]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



## □ 산업경제 정책의 실정

- 2009.10.27, 나오히마 경산상을 의장으로 하는 ‘성장전략검토회의’ 설치, 11월 중순까지 40~50명의 지식인과 토론
  - 키워드는 ‘아시아와의 일체화’, ‘국민 참여에 의한 내수 확대’, ‘지구온난화대책에 의한 경제성장’
  - 아시아 지역의 외수 확대는 염두에 두면서도 내수주도형으로 정책을 전환, 자민당 정권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감세로 고용 창출, 임금 상승을 가능케 한 것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개인 소비 확대를 도모
  - 고용의 밑바탕이 될 노동집약적 산업(의료, 간호)을 중점적으로 지원, 그러나 이 산업분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0%에 불과함으로 이념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는 우려의 목소리

## □ 정치외교 정책의 실정

- 2009.10.24,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‘동아시아공동체’ 구상은 무지개와 같은 것이며 윤곽이 아직 잡혀 있지 않은 단계
  - 구체적 전략 및 계획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
  - 2009.10.25, 한중일이 산관학에서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

## 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, ‘특집 민주당경제 총점검’ (2009.11.4)